

光日春秋



육 동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가 30주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체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다. 그러나 지난 30년 지방자치가 제기한 낭비와 비능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부작용과 폐해는 지방자치의 무용론과 축소론까지 불거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제도와 시스템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전면적인 자치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독립성과 자율성이지만 주워치는 권한만큼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권한과 책임의 주체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 원리는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끔찍했던 이태원 참사와 청주 오송지하도 참사, 경북 산불을 비롯한 재해·재난사고, 그리고 묻지마 폭력·살인사건으로 지역안전과 치안이 구멍난 것도 자치경찰제도의 결함이 큰 원인 중 하나다. 잇따른 교사

기 고



이 병 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 수석부위원장·전 국회의원

역사는 패권국의 쇠퇴가 외부 위협보다는 내부의 구조적 모순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긴 바 있다. 20세기 초 영국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버리고 보호관세와 제국 특혜 제도로 후퇴했던 과정은 오늘날 미국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 영국은 1932년 수입 관세법을 통해 대부분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오타와 회담에서 영연방 내부에는 특혜를, 외부에는 장벽을 세우는 이중 구조를 제도화했다. 단기적 산업 보호 효과는 있었지만, 보호막 안의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혁신 능력을 상실하면서 장기 침체로 이어졌고, 결국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게 되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2025년 4월 5일부터 전 품목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 중장비 트럭에 25%,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을 노골적으로 등급화하는 체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파이브 아이

종교칼럼



중 현
광주 중심사 주지

한창 재앙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자였다. 내가 있는 곳 역시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실내도, 그렇다고 바깥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어서 배경이 온통 밝은 톤의 연회색으로 처리된 화면 속에 있는 듯 했다. 아예 모양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오로지 연회색의 색깔 뿐이었다. 대개 꿈은 깨고 나서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이고 황당하다. 하지만 정작 꿈 속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하니 마련이다. 한여름 밤의 그 꿈 역시 그랬다. 다만, 이제 나는 죽었다는 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이 바늘에 찔린 듯 너무나도 생생해서, 지금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쓸쓸한 체념, 회한, 열지만 지워지지 않는 슬픔, 막연한 다짐 같은 것들이 뒤섞인 매우 낯선 감정이었다. 잠이 깨다. 꿈 속의 그 감정은 깨고 나서도 여전히 어지고 있었다. 언젠가 반드시 나는 죽는다는 확신이 잔잔하게 밀려왔다. ‘하긴, 인생은 한바탕 꿈이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 데, ‘이젠 뭘 하지?’ 하는 아주 희미한 생각이 느낄 듯

지방자치, 헌법에 보장해야 주민주권시대

폭행과 자살로 학교교실이 붕괴 위기를 맞은 근본 원인에도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교육자치제도결함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게다가 지방행정, 지역치안과 소방 및 지방교육이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그 권한과 책임이 제각기 분산돼 있으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결국, 지역의 문제를 지방자치체가 지방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의 주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뿌리깊은 중앙집권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을 대폭 개정해서 지방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되 그 책임성을 일원화시키는 개혁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필수적인 전제가 헌법개정이다. 헌법은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하는 국가공동체의 강제적인 최고가치 규범이다.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개정해야 하위 법령 등의 개혁과 개정이 가능해 진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조문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조문으로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라는 과도기적 행태만을 보장할 뿐, 주민주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중앙중속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태

패권의 함정과 한국의 생존전략

즈'라 불리는 1등급 국가와는 달리 한국과 일본은 2등급으로 묶여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까다로운 투자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의 미국내 현금투자 3,500억 달러를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내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과 관련 근로자 300여 명 이상을 억류하고 강제 귀국시킨 것이다. 또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100달러에서 10만 달러 (1인당 1억 4천만원)로 인상 시키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마초 행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생존전략 미국이 한국을 2등급으로 대우하는 모순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SK하이닉스는 2025년 1분기 글로벌 DRAM 시장에서 36%의 점유율로 1위에 올랐다. HBM(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70% 이상을 점유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조선업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2025년 3월 한국은 글로벌 조선 수주에서 5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93%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해군이 직접 한국 조선소에 차세대 전환 건조를 맡기고 있는 상황은 미국의 한국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삶의 축복, 불사의 형벌

말 듯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삶은 아주 잠깐의 공백도 결벽중적으로 용납하지 않았다.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끊임없이 할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로구나!’ 소리 없는 탄식이 무겁게 새어 나왔다. 상어는 부레가 없다.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가라앉는다. 무엇보다 계속 움직여서 아가미로 물을 받아들여야 호흡할 수 있다. 멈추면 곧 죽음이다. 그러니 상어는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 났다. 상어는 중생들의 삶이 지닌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살아있는 중생들은 몸이 되었건 마음이 되었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산 자들은 철칙 같이 믿고 있다. 새벽 2시 2분. 몸은 꿈 밖으로 빠져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꿈 속이다. 잠시 멍하니 책상 머리에 앉아 있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쇼츠 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뒤부터 계속 추억의 팝송들만 이어졌다. ‘스모키’, ‘야비’, ‘비지스’ ...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다. 레디메이드된 감정들이 구역구역 밀려왔다. 약간의 쓸쓸함, 아련함 같은 감정들이 마구 잡이로 버무려졌다. 죽음 마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싸구려 기성 제품이 되어 버린 듯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죽음은 매순간을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지난 여름의 기억이 불쑥 소환된 것은 며칠 전 다시 본 ‘도깨비’ 때문이다. 10여년 만에 다시 본 ‘도깨비’는 불사(不死)의 형벌을 받은 자의 1인칭 시점 서사극으로 다가왔다. 김신은 전장에서 술한 생명을 죽인 벌로 불사의 형벌을 받는다. 형벌의 삶을 이어가던 김신은

생적으로 왜곡돼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 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확립적 지방자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원,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4대 자치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중앙과 지방 간 사무처리 원칙, 자치회의의 권한 그리고 주민의 위상과 참여 등이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들에게 관련된 지역의 공동문제에 관해 주민의 자주관리가 존중되는 풀뿌리 지방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묘에 선 한국지방자치가 바른길을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정신과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민주권시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한 첫 단추가 헌법개정이 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위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치권과 지방4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언론이 앞장서야 할 중대한 시점이 서있다.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절호의 기회다.

으로 드러난 NATO의 방산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서 한국의 신속하고 대규모 생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동맹국 서열화와 차별적 대우에 맞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주권의 확립이다.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확보한 글로벌경쟁력을 바탕으로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 메모리 기술에서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둘째, 다변화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유럽, 인도, 동남아시아 등과의 다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 안보의 강화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달러 패권 변화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원화 국제화, 대안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연성권력의 확대이다.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가치와 비전을 세계에 확산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패권국의 흥망성쇠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지만, 실력과 가치를 갖춘 국가는 어떤 질서 속에서도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한국이 추구해야 할 것은 특정 패권국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립적 국가 역량의 구축이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생존전략이다.

도깨비가 된다. 그 형벌을 면하는 길조차 운명적인 슬픈 사랑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어쩌면 한낱 도구에 불과할 수도 있는 사랑이다. 그러나 도깨비는 그런 사랑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불사의 형벌을 선택한다. 도깨비가 사랑한 것은 자신의 신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었다. 그는 불사의 형벌마저도 기꺼이 사랑하기로 했다. 어쩌면 영원히 회귀하는 삶도 운명적으로 사랑이라고 했던 니체가 ‘도깨비’의 모티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도깨비에게 불사는 형벌이었지만, 삶에 취한 중생들에게 불사는 위안, 축복, 모든 행복의 근원, 너무나 당연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 존재의 든든한 토대였다. 불사의 형벌로 고통받는 존재에게 죽음은 곧 평안한 휴식이었다. 그러나 산 자에게 죽음은 미지의 두려움이다. 산 자가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심신을 움직이려는 것도 결국 죽음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삶에 중독된 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뭐하지?’라고 독백하며 삶에 조금의 틈이라도 생길까 봐 조마조마해 한다. 삶의 중단은 곧 죽음일 뿐이다. 어리석은 중생은 삶 속에 갇혀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에 집착한다. 그러나 생과 사를 벗어나 생사를 바라보면, 무심하게 피고지는 생명들의 향연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자유인은 생사와 부대끼면서 생사를 초월한다. 니체는 율회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마저도 사랑하라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은 깨침을 증득하여 율회의 사슬을 끊어 내라 하였다. Amor fati? 니체는 과연 자신의 운명을 사랑했을까

社 說

RE100 법안, 광주·전남 지역발전 계기되길

광주·전남지역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거점으로 도약할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동남갑) 의원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법안 골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지구·전력망지구·산업지구·정주지구를 통합한 RE100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전기요금 감면, 주택공급·임대 우선, 인재양성 같은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유망 기업을 유치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방침이 적혀있다.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이 엇그제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가칭)도 전남에 RE100 산단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소비를 한 도시에서 선순환시키는 신도형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시설지구(산단)와 배후정주지구(주거),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를 한 체계로 지정·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주·전남 ‘상생’을 지향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은 ‘대규모·대면적·해상형’ 재생에너지 생산을, 광주는 ‘내륙·도시형·영농형’ 분산발전을 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전남은 ‘대규모 전력생산 허브’, 광주는 ‘도시형 수요·활용 허브’로 역할을 나눠 ‘지산지소’(地産地消·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현안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이 심의과정에서 애초 취지를 잃지 않도록 차질없이 쟁겨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해 광주·전남이 RE100 정책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양 시도는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상생을 중심에 두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역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으론 희망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앞서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부동산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려낼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와 대출 조이기가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열 지역’에 대한 대책에 치중해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 자체가 실종된 지방 중소도시와 인구 감소 지역에는 그나마 조금 있던 거래마저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수도권만을 표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조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

론 지방 부동산 시장 대출까지 조여 자체 대출 실적을 낮추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 역시 수도권 아파트 물량을 크게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으로 결국에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하고 전국 건설 자본이 수도권으로 빨려드는 블랙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방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서야 하며 필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 지방 맞춤형 정책을 통해 거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이다. 정부가 지방 투자 과열을 예상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걱정할 것은 과열이 아닌 소멸이다. ‘벼랑 끝’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부터 대출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대책뿐이다.

無等鼓🥁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야당은 국정감사 과정에 김현지 실장의 재산공개 등을 놓고 연일 날선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김현지에 스톡커 수준으로 집착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특히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김 실장은 단순한 ‘갇간지

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성남파’의 2선 후퇴를 주장했지만 김 실장은 끝내 자리를 지켰다. ‘실세’는 세력이나 기운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어느 정권에서나 실세는 존재했고, 이들의 역할은 정권의 평가로 직결된다. 실세의 잘못 휘두른 권력은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었고, ‘박근혜 최순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수 많은 실세가 입방아에 올랐고, ‘안방 실세’ 김건희의 존재는 두고두고 화근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정한 실세는 국민이어야 할 것이다. /오광록 서울본부취재부장 kro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주일보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피니언 23